

미군정기 『민주중보』의 이념적 성향*

채 백**

이 논문은 미군정기 부산 최초이자 최대의 신문 『민주중보』의 이념 성향을 분석하였다. 그동안 미군정기 신문의 이념 성향에 대해서는 주로 미군정의 자료를 바탕으로 전국매체를 대상으로만 논의해 왔다. 부산 신문들의 이념 성향에 대해서는 주로 관계자들의 회고를 바탕으로 단편적인 언급만이 이루어지면서 평가의 혼란도 초래되었다. 본 논문에서는 『민주중보』의 이념 성향을 초창기 참여 인물들과 지면의 논조 두 가지 측면에서 분석해 보았다. 초창기 참여 인물들은 일제 말기 일본인 발행의 『부산일보』에 근무했던 사람들이 중심이 되었는데, 대부분 일제기에 언론뿐만 아니라 청년운동 등 다양한 활동을 통해 좌익 활동을 한 경력이 발견된다. 그러나 이들이 『부산일보』에 근무했다는 사실은 미군정기 이들의 사상이 투철한 것은 아니었음을 말해준다. 지면의 논조는 1946년 1월 2일 조선공산당이 신탁통치 지지를 발표한 사건과 그해 5월 정판사 위조지폐 사건, 그리고 9월 노동자 총파업의 세 가지 사건에 대한 보도 태도를 우익지 『동아일보』, 중립지 『서울신문』, 좌익지 『독립신보』, 극좌 『해방일보』의 지면과 비교하였다. 분석 결과 『민주중보』의 논조는 중립에 가까운 것이었으며 총파업에 대한 보도에서는 다소 좌경적인 보도 태도를 보여 주었다. 이러한 사실들을 종합할 때 『민주중보』의 이념 성향은 중도를 중심으로 하면서 사안에 따라서 좌익적인 성향도 보였다고 평가할 수 있겠다.

주제어: 민주중보, 언론사, 부산 지역언론, 미군정, 이념성향, 언론인, 보도태도

1. 서론

1) 문제의 제기

이 논문은 미군정기 부산 최초인 1945년 9월 1일 『중보』라는 제호로 창간되었으며 발행부수도 가장 많았던 『민주중보』¹⁾의 이념적 성향을 분석하려고 한다. 주지하듯이 미군정기는 식민지배에서 해방되어 새로운 역사적 가능성이 펼쳐지는 가운데 민족국가 건설이라는 시대적 과제를 둘러싸고 다양한 이념과 주장들이 전개되면서 정치투쟁이 펼쳐졌던 시기였다. 언론 분야에서도 다양한 정치 세력들이 정치적 이념과 주장을 신문과 잡지 등의 매체를 통해 정론 투쟁을 전개하였던 이른바 정론지의 시대로 평가(김민환, 1996, 317~318쪽)되고 있다.

그동안 언론학계에서는 미군정의 언론에 대해서는 상당한 연구 성과가 축적되어 왔다. 다수의 연구들은 미군정의 언론정책과 통제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예컨대, 김복수(2005, 1991, 1988)와 박용규(1988), 문종대(1989) 그리고 현경보(1988)와 이선영(1982) 등이 대표적이다. 이 연구들은 미군정의

* 이 논문은 2008년도 부산대학교 인문사회연구기금의 지원을 받아 연구되었음.

** 부산대 신문방송학과(bchae@pusan.ac.kr)

1) 일부에서는 이 『민주중보』가 해방 직후 국내 최초로 나온 국문신문이었다고 주장(김대상, 1981, 180쪽과 자명김지태 선생전기간행위원회, 2003, 191쪽; 김형두, 1995, 120쪽)하는데, 이는 사실과 다르다. 박정규의 연구(1997, 77~78쪽)에 의하면 『민주중보』보다 먼저 대전에서 일제기부터 발행되던 『중선(中鱗)일보』가 활자를 국문으로 바꾸어 1945년 8월 15일부터 발행하였으며, 전주의 『건국일보』가 8월 17일자로 창간되었으며 광주의 『전남신보』도 사용 언어는 언급하지 않았지만 1945년 8월 31일자로 창간되었다고 한다.

언론정책이 점령정책의 틀 내에서 좌익언론을 탄압하고 우익언론을 비호하는 정책을 펼쳐 현대 한국 언론의 근본 구조와 이념을 형성하는 결정적인 계기가 되었다는 점을 제시하고 있다. 그 외에는 지면 분석을 통하여 신문의 이념적 지향과 성격을 규명한 연구들(김민환, 2001a, 2001b; 김영희, 2000; 이용성, 1991)이 있다. 이 연구들은 구체적인 지면 분석을 통해 당시 신문들의 이념적 지향을 규명한 데서 의의를 평가할 수 있을 것이다. 그밖에도 미군정기 언론인 단체의 활동을 분석한 박용규의 연구(2007) 등이 주요 연구 경향을 구성한다고 하겠다.

그러나 이 연구들은 대부분 미군정의 정책이나 서울에서 발행된 전국 매체를 대상으로 한 것들이다. 미군정기 지방 언론을 분석한 연구로는 김영희(2005)와 유종원·김송희(2005)가 있을 뿐이다. 김영희는 미군정청의 조사 자료를 바탕으로 당시 농촌 지역의 매체 보급 실태를 분석하여 미군정기 수용자 연구로는 유일한 성과라고 평가할 수 있다. 유종원·김송희의 연구는 광주 지역을 대상으로 당시 미군정청의 언론 정책을 분석하고 3개 지방지의 경영 주체들과 지면 분석을 토대로 하여 광주 지역 언론의 이념적 동향을 분석한 것이다. 이 연구는 미군정기의 지역 언론 동향을 구체적으로 규명하였다는 데서 그 의의를 평가할 수 있을 것이다. 그 외에는 지역의 언론사를 다룬 통사적 연구가 지역별로 이루어졌다. 부산 언론의 통사를 정리한 김대상의 저술(1981, 2004)과 광주와 전남 지역의 언론사를 정리한 광주언론인동우회(1991)와 김기태(2001)의 저술이 있다. 대구 지역(김영재, 2003)과 경남(이광석, 1997), 그리고 제주 지역(이문교, 1997)의 언론사가 각기 정리된 바 있다.

이처럼 전국 단위의 언론사 연구에 비해 지역의 언론사 연구는 이제 초기 단계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유종원·김송희(2005, 276쪽/302쪽)는 “지역 언론사를 중앙중심적 논의에서 탈피해 지역 차원에서 어떻게 구체화되었는가를 규명하는 작업들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심도 있는 지역 언론사 논의의 필요성을 주장하였다. 이 연구는 이러한 문제의식에서 출발하였다. 미군정기 부산에서 10여 종의 신문이 발행되었는데, 이 신문들을 대상으로 한 깊이 있는 연구는 현재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본 연구에서는 군정기 부산 지역의 『민주중보』를 연구 대상으로 정하였다. 이는 『민주중보』가 부산에서 가장 먼저 창간되었으며 가장 많은 발행부수를 기록하였던 신문이기 때문이다. 김대상(1981, 181쪽)에 의하면 1946년 9월경 『민주중보』의 발행부수는 7만 부에 이르렀다고 한다. 1947년 3월말과 4월초의 미군정청 주간 정보 보고 자료에 의하면 당시 『민주중보』의 발행부수가 16만 부로까지 기록되어 있다(다음의 <표 2> 참조). 이 자료는 현실성이 결여되어 신뢰하기 어렵다. 같은 자료에 나타난 서울 지역 신문의 발행부수를 보면 『경향신문』이 6만 부, 『조선일보』가 4만 9천 부, 『동아일보』가 4만 7천 부로 되어 있다. 또한 당시의 인구 자료로 보더라도 이 자료는 지나치게 과장되어 있다. 부산을 포함한 경남의 인구 통계가 1944년에는 2,417,384명이며, 1949년에는 3,134,829로 되어 있다(국가통계포털 www.kosis.kr. 2009.7.7). 부산의 인구는 해방 직후 30만에서 얼마 안 되어 80만으로 증가하였다고 한다(강대민, 2003, 261쪽). 이러한 시장 조건을 고려할 때, 『민주중보』의 발행 부수가 16만이라는 것은 과장된 자료라고 할 수밖에 없겠지만 이 신문이 당시 부산뿐만 아니라 다른 지역과 비교해서도 뒤지지 않은 발행부수를 기록했던 신문이라는 사실만은 확인할 수 있겠다.

『민주중보』를 연구하는 또 다른 의의는 이 신문이 현재 미군정기 부산 지역사 연구에서도 매우 중요한 기초 자료가 되고 있다는 점이다. 『민주중보』는 미군정기에 발행되었던 신문들 중에서 현재 보존 상태도 비교적 양호한 편이다. 1949년 발행분까지는 마이크로 필름화되어 있으며 특히 1946년

말까지는 국립중앙도서관을 통해 온라인 서비스되고 있다(http://www.dlibrary.go.kr/). 전술한 대로 미군정기 최대 신문이었고 보존 상태도 양호하여 미군정기의 부산지역 역사를 연구하는데 가장 기본적인 자료가 되고 있는 것이다(예컨대, 역사문제연구소, 1993). 따라서 이러한 신문의 성격을 보다 체계적으로 규명하는 작업은 언론사적인 맥락에서 뿐만 아니라 미군정기 연구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2) 『민주중보』의 이념 성향에 대한 기존 논의

본 연구에서는 『민주중보』의 이념 성향에 초점을 맞추려고 한다. 그동안 미군정기 부산 지역 신문의 이념 성향에 대해서는 체계적으로 분석하기보다는 당시 미군정의 자료나 언론계 현장에 몸담았던 인물들의 회고 등을 토대로 해서 단편적인 언급만이 이루어졌다. 부산직할시가 펴낸 『부산시사』에서 제시된 내용을 정리하면 아래 <표 1>과 같다. 『부산시사』의 자료는 시점과 출처를 밝히지 않은 채 평가하고 있는데, 『민주중보』에 대해서는 중립을 표방하였지만 미군정은 좌경으로 인식하였다고 언급하고 있다.

<표 1> 『부산시사』에 나타난 부산 언론의 이념 성향

제 호	성 향
민주중보	중립 표방, 미군정은 좌경으로 인식
부산정보	극우
인민해방보	극좌
신한(新韓)일보	극우
부산매일신문	중립
대중신문	좌익
자유민보	우익
부산신문	중립, 우익은 좌경시
부산일보	중립
조선일일신문	-
산업신문	-

* 출처: 부산직할시사편찬위원회(1991, 546~554쪽에서 발췌)

한편 당시 미군정청의 정보 보고 자료는 부산의 신문들에 대해 다음과 같이 그 성향을 평가하면서 『민주중보』를 극좌로 평가하였다.

이후의 문헌들에서도 『민주중보』의 이념 성향에 대해서는 중립 혹은 좌익이라는 평가가 혼재되어 나타난다. 한국신문연구소가 편한 사료집(1975)을 보면 한 자료 내에서도 263쪽에서는 좌익지로 평가했다가 423쪽에는 중립지로 평가하는 혼란을 보여주었다. 김대상(1981, 181쪽)은 『민주중보』가 “엄정 중립의 제작 방향을 지향”하였다고 평가하였으며 윤덕영(1995, 374쪽)도 “전반적인 논조는 중도지이나 1946년까지는 좌익에 대한 기사도 상세히 다룬 편”이라고 평가하였다.

이처럼 『민주중보』의 이념 성향에 대한 평가가 엇갈리는 것은 몇 가지 이유로 설명할 수 있을 것이다. 먼저 중립이라는 평가는 신문이 표방한 내용이나 관계자들의 회고에 의존한 때문으로 보인다.

<표 2> 미군정이 평가한 부산 지역 신문의 이념 성향(1947년 3, 4월)

제 호	소유주	편집인	발행부수	성 향
조선일신문 ²⁾ *	노성권	권언성	8,000	중도
인민해방보*	노백용	노재갑	20,000	?
자유민보*	김치병	김치병	50,000	?
민주중보*	김형두	장명준	160,000	극좌
부산중보 ³⁾ *	곽 ⁴⁾ 경중	채준영	1,500	중도
부산매일신문*	이택국	채준탁	10,000	좌익
부산신문*	김세호	김세호	10,000	좌익

* 문서 작성 당시 계속 발행 여부가 확인이 되지 않는 신문들이라고 기록되어 있다

** 출처: G-2 Weekly Summary No.82, 1947.3.30~1947.4.6(일월서각 편, 1986, 169~170쪽에서 부산 지역 신문에 관한 내용만 발췌).

이 신문은 『중보』라는 제호로 창간했다가 미군의 진주와 함께 1945년 9월 20일 『민주중보』로 개제하면서 ‘민주정치와 민주중보’라는 제목의 사설을 통해 이념을 넘어 민주주의를 지향하는 인민의 뜻을 담겠다는 방침을 천명하였다. 초기 편집국장을 맡았던 김형두(1995, 128쪽)도 창간 당시 중립적인 편집방침을 정했다고 술회하였다.

한편 좌익이라는 평가는 대개 미군정의 자료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표 2>와 같이 당시 군정청은 『민주중보』를 극좌로 파악하고 있었다. 1945년 10월의 『주한미제40사단정보참모부일일보고서』도 당시 『민주중보』의 성향을 ‘중립을 표방하고 있으나 최근 공산주의적 입장에 경도되고 있다’고 평가하였다(G-2 Periodic Report No.23, 1945.10.17~10.18,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1993, 554쪽).

신문의 성향에 대해서는 당사자들이 표방하거나 술회하는 바를 그대로 수용하기는 어렵다. 서양 근대의 객관저널리즘 이후 대부분의 신문들이 사시나 지면을 통해서는 중립과 불편부당을 표방하는 게 보편적이다. 관계자들의 회고도 여러 가지 변수들이 개입함으로써 복잡한 양상을 띠게 마련이다. 김형두의 회고록도 출판된 것은 1995년이지만 책에 수록된 저자 서문에는 1975년으로 기록되어 있다. 원고가 쓰인 것은 레드 콤플렉스가 굉장히 고조되었던 1975년 이전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군정 당국의 자료도 그대로 수용하기는 어렵다. 당시 한반도를 분할하여 소련과 대치하고 있는 상황에서 미군정도 정치적인 입장이 있으며 정책 수행이라는 목표가 있기에, 그에 입각해서 평가하였을 것이기 때문이다.

이처럼 『민주중보』의 이념 성향에 대한 평가가 다르게 나타나는 것은 실제 발행 되던 당시의 신문에 대한 구체적인 분석 없이 간접적인 자료들에 의존하다보니 혼선이 빚어지는 것이라고 할 수 있겠다.

2) 『조선일일신문』의 오기인듯, 원문은 ‘CHOSEN IL SINMUN’이라 되어 있다.

3) 『부산정보』의 오기이다.

4) 곽경중(郭慶鐘)의 오기이다.

3) 분석의 대상과 방법

결국 신문의 이념 성향을 평가하기 위해서는 발행 주체들의 성향과 지면의 논조 분석이 필수적이라고 하겠다. 먼저 어떠한 사람들이 발행 주체가 되었느냐 하는 점이 그 신문의 방향과 성격을 좌우할 것이다. 이를 위해 『민주중보』에 참여하였던 사람들의 경력과 성향 등을 분석하여 그 성향 분석의 기초로 삼고자 한다.

다음으로 신문은 궁극적으로 지면으로 말하는 것이다. 신문의 성격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지면에 대한 분석이 필수적이다. 본 연구에서는 『민주중보』의 지면을 분석해 보려고 한다. 그러나 『민주중보』의 현재 보존 상태가 완벽하지 않다. 전술한 대로 마이크로필름과 온라인 서비스되고 있지만 결호들이 많으며 지면의 상태가 안 좋아 판독이 어려운 경우가 많아서 체계적인 분석이 어려운 상황이다. 본 연구에서는 『민주중보』의 성향이 중립 내지는 좌익, 혹은 극좌로 평가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해서 미군정 기간 동안 벌어졌던 사건 중 좌익이 관련된 몇 개의 사건에 대한 보도 태도를 분석해 보려고 한다. 본 연구에서 분석 대상으로 삼은 사건은 3가지이다. 1945년 말부터 전개된 신탁통치를 둘러싼 대립의 와중에서 1946년 1월 2일 조선공산당이 신탁지지를 선언한 것과 1946년 5월 15일에 발표된 정관사 위조지폐사건, 1946년 9월의 노조 총파업이 그것이다.

신문의 논조나 이념 성향은 상대적인 것이다. 따라서 이를 평가하기 위해서는 다른 신문들의 논조 및 이념 성향과 비교하는 작업이 필수적이다. 본 논문에서는 3가지 사건에 대한 『민주중보』의 보도 태도를 기존 연구들에서 극우로 평가되는 『동아일보』와 중도의 『서울신문』, 좌익지 『독립신보』, 극좌 『해방일보』(박용규, 1988, 69쪽)의 보도 태도와 비교해서 평가해 보려고 한다. 그러나 당시 좌익성향의 신문들은 특히 부침이 심했기에 『해방일보』와 『독립신보』는 세 사건 모두에서 분석하지는 못했다. 신탁통치 관련 기간에는 『독립신보』(1946.5.1. 창간)는 발행되지 않았으며 9월 총파업 기간은 『해방일보』가 폐간된 이후였다. 다시 말해 좌익이 연루된 사건을 중심으로 해서 기존 신문들의 보도 태도와 비교함으로써 『민주중보』의 보도 태도가 이념 성향의 스펙트럼에서 어떤 위상을 차지하는가를 평가하였다. 보도의 논조는 기사의 위치와 양, 그리고 제목과 전체적 보도 태도를 중심으로 평가하였다.

분석 대상 사건이 1946년에 집중된 것은 분석 대상 자료의 문제 때문이다. 좌익과 우익이 대립한 사건이 1946년도에 편중되었다. 1946년부터 좌익에 대한 미군정의 탄압이 시작되어 미군정기 후반으로 가면 우익이 득세하면서 언론계의 주도권도 우익이 장악하여 좌익 언론의 입지는 대폭 축소되었다(김민환, 2001b, 22쪽). 이러한 상황 때문에 1947년 이후로는 『민주중보』의 이념 성향을 분석하기에 적합한 사건이나 비교 대상 신문을 선정하기가 현실적으로 어렵기 때문이었다.

2. 『민주중보』의 운용과 참여 인물의 이념 성향

1) 『민주중보』의 창간과 운용

(1) 『중보』의 창간

『중보』가 창간된 것은 해방된 지 보름만인 1945년 9월 1일이었다. 이는 일제기 일본인들에 의해서

부산에서 발행되던 『부산일보』의 시설과 인력이 있었기에 가능했다. 『부산일보』에 근무했던 사원들이 중심이 되어 신문을 간행하기 위한 9인위원회를 조직, 준비에 착수하였다. 김형두(1995, 116~117쪽, 127쪽)에 의하면 9인위원회는 이갑기(李甲基)가 위원장 겸 편집국장을 맡고 총무국장에 김형두(金炯斗), 영업국장에 박승표(朴承杓), 공무국장 이소조(李小祚), 사업국장 이만용(李萬鎔), 그리고 평위원으로 석광수(石光守)와 그밖에 김 씨 성 두 사람과 최모 씨가 참여했다고 한다. 그 후 2명이 빠지면서 7인위원회가 되어 신문 운영의 주체 역할을 했다.

『민주중보』는 창간부터 중립적 논조를 지향했다고 한다. 김형두(1995, 127쪽)에 의하면 초기 7인위원회에서 신문의 편집 방침을 놓고 내부 토론을 여러 차례 벌인 끝에 “논설은 자유민주주의를 바탕으로 시시비비를 가리고 기사는 있는 사실 그대로를 보도하여 불편부당 공정을 기하는 춘추정필”로 정했다는 것이다.⁵⁾

당시 우리말 활자도 없던 상황에서 부산 시내의 인쇄소를 뒤져 초량에서 한 세트를 발견해서 신문 창간이 가능했다고 한다(김형두, 1995, 120쪽). 신문의 체제는 타블로이드판 2면으로 발행되어 1면은 전국 뉴스와 외신을 싣고 2면에 부산 등 경남 지방의 소식을 게재하였다. 새로운 세상이 전개되면서 오랫동안 볼 수 없던 국문 신문이 출현하자 시민들의 환영을 받아 금세 수만 부 발행하는 대신문으로 성장하였다(김대상, 1981, 181쪽).

(2) 『민주중보』의 운용

1945년 9월 17일 미군이 부산에 진주하자 『중보』는 제호를 『민주중보』로 바꾸었다. 개제의 이유를 김형두(1995, 120~121쪽)는 미국이 표방하는 민주주의를 신봉한다는 것을 보이기 위해서였다고 회고하였다. 부산 내 대창정(大倉町) 4정목(현 중구 중앙동4가)의 구 『부산일보』 사옥에서 창간한 『민주중보』는 미군정청에 의해 1946년 6월 3일 사옥을 초량정 593번지 협동인쇄소로 옮겨야 했다.⁶⁾ 군정청이 강제로 퇴거시킨 사유는 ‘관리부적당’이었지만 실제로는 군정 당국의 언론정책이 좌익언론을 통제하고 우익언론을 비호하던 맥락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평가된다(부산일보사사편찬위원회, 1985, 267~268쪽). 당시 미군정은 귀속 재산의 처리에서도 이러한 통제 정책을 그대로 적용하였던 것이다(김민환, 1995).

1946년 10월 대구에서 10·1사건이 발발하자 『민주중보』는 호외를 발행하였다. 이것이 태평양미국 육군총사령부 포고령 제2호⁷⁾를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무기 정간을 당했다(『한국언론연표II』, 1946. 10.4). 운영위원장 이갑기와 판매부장은 체포되고 편집국장 김형두는 인책 사임하였으며 테러단의 습격으로 시설이 파괴되었다(김대상, 1981, 182쪽). 그해 11월 9일 정간이 해제되어 11월 15일자부터 속간하였다(『한국언론연표II』, 1946.11.9). 박기출은 속간호에 실린 “유일의 노선: 중보재출발을 축하하면서”라는 기고를 통해 ‘현단계의 조선이 갈 길은 좌도 아니고 우도 아니라 자본주의와 공산주의의 절충주의적 노선을 통해 독립된 민족국가를 건설하는 것’이라고 강조하였다. 창간 초부터 중립을 표방하였지만 무기정간을 당하면서 중립을 지향한다는 목표를 다시 한 번 천명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속간 이후 주식회사로 개편하여 1947년 5월 박기출이 사장에 취임하였다(『한국언론연표II』, 1947.5, 245쪽). 그러나

5) 현재 창간호가 남아 있지 않아 창간사 등을 확인할 수 없다.

6) 당시 구 부산일보 사옥은 박수형에 양도되어 1946년 9월 10일 『부산일보』 창간이 이루어지게 되었다.

7) 1945년 9월 7일에 공포된 이 포고령 제2호의 내용 중에는 “공중치안 질서를 교란한 자 정당한 행정을 방해하는 자 또는 연합군에 대하여 고의로 적대행위를 하는 자는 점령군군율회의에서 유죄로 결정된 후 동회의의 결정하는 대로 사형 또는 타 형벌에 처함”이라고 규정하고 있다(『한국언론연표 II』, 922쪽).

오래 가지 못하고 다시 운영위원회 중심으로 바뀌면서 전성호(田性昊)가 사장에 취임하였다(박경장 편, 1959, 28쪽).

『민주중보』는 지면의 내용에 불만을 품은 세력들에 의해 여러 차례 테러를 당하였다. 1947년 3월 25일에는 괴한 3명이 공장에 침입하여 작업 중이던 사원 2명이 크게 다치고 신문 700여 부를 탈취당하는 사건이 발생하였다(『조선일보』, 1947.3.28, 2면). 그해 8월 8일에도 정체불명의 청년 20여명이 회사를 습격하여 경비하던 경찰의 총기를 탈취한 후 공무국원 2명에 중상을 입혔다(『조선일보』, 1947.8.13, 2면). 9월 13일에도 모 단체의 습격을 받아 시설이 거의 파괴될 지경에 이르렀다(『조선일보』, 1947.9.19, 2면).

미군정기에 언론사에 대한 테러는 매우 빈번하게 발생하였다. 언론의 논조에 불만을 품은 정치단체나 사회단체들에 의해 직접적인 테러의 대상이 되곤 했던 것이다. 『민주중보』에 대한 테러들도 자세한 내막이 보도되지는 않고 있지만 대부분 논조에 불만을 품은 정치 성향의 단체들에 의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1948년 들어 『민주중보』는 커다란 필화사건에 휘말렸다. 6월 5일자 2면 톱기사로 총독부에서 재무국장을 지낸 일본인이 부산에 나타났으며 학무국장, 조선은행 부총재 등 고위 관료를 지낸 일본인들도 조선에 들어왔다고 보도하면서 “이들이 조선에 온 경위와 금후의 동정이 극히 주목된다”고 덧붙였다. 이 기사를 국내의 다른 신문들도 대부분 받아서 보도하면서 반일감정을 자극하는 파문을 일으켰다. 이에 경무부장과 공보부장은 6월 15일 공동담화를 통해 이 보도는 근거 없는 허위 사실이라고 발표하였다(『조선일보』, 1948.6.16, 2면).

이 사건으로 『민주중보』는 1948년 6월 16일부로 태평양미국육군총사령부포고령 제2호에 의거, 무기정간 처분을 받았으며(『조선일보』, 1948.6.19) 7월 12일 편집부장 조병중(曹秉宗), 사회부장 손연순(孫連淳), 남로당원 김래엽(金來燦)은 기소되었으며 편집국장 이만용과 기자 성병규(成炳奎)는 석방되었다(『한국언론연표II』, 1948.7.12).

이때 정간은 두 달여가 지나서 정부 수립 직후인 1948년 8월 17일에 속간되었다(『한국언론연표II』, 1948.8.17). 속간하면서 『민주중보』의 진용은 사장에 최천택(崔天澤), 주간 이만용, 편집국장 강재은(姜在殷)으로 바뀌었다(김대상, 1981, 182쪽). 1950년 2월 1일부터는 김예준(金禮俊)이 사장이 되면서 제호도 『민주신보』로 바꾸어(『동방신문』, 1950.2.2, 2면) 발행하다가 5·16쿠데타 후인 1962년 8월 1일 시설기준 미달로 폐간되고 말았다(부산일보사사편찬위원회 편, 1985, 484쪽). 한때 부산 최대의 신문이었지만 1953년의 부산역전 대화재 때 사옥과 모든 시설, 자료 등을 다 잃어버리고는 사세가 기울어 끝내 이를 극복하지 못했다는 것이다(박경장 편, 1959, 29쪽).

2) 『민주중보』의 참여 인물

(1) 이갑기

『민주중보』 창간 주체였던 7인위원회의 위원장 이갑기의 개인사에 관한 내용은 월북했기 때문인지 현재까지 잘 알려지지 않고 있다. 현재 확인되는 기록들을 토대로 그의 경력을 정리해 보려고 한다. 이갑기는 일제기 사회주의적 성향의 예술인들이 조직한 조선프롤레타리아예술동맹(카프)에 참여한 문인이면서 화가였다. 그러나 1935년 카프 조직이 와해될 때 검거되었다는 기록만 나올 뿐(『동아일보』,

1934.7.1, 1934.11.23, 1935.1.26, 1935.10.28, 1935.10.29) 언제부터 참여했는지는 확인이 안 된다. 카프에 관한 저술을 봐도 그가 1933년 내부 갈등 과정에서 박영희와 함께 탈퇴 선언을 했다는 사실만 언급될 뿐(역사문제연구소 문학사연구모임, 1989, 100쪽)이다.

문인이자 화가였던 그는 1930년대 언론에 필자로서, 그리고 기자로서 참여하였다. 1930년 4월경에는 『중외일보』에 한 컷짜리 만평을 그렸으며 그해 8월 22일부터 9월 3일까지는 3면에 ‘노(老)명탕이’라는 제목의 4칸짜리 만화를 연재하였다. 1931년에는 『중외일보』 대구지국 기자로 근무했던 것으로 보인다. 『동아일보』 1931년 1월 22일자를 보면 이갑기가 불온문서 살포 혐의로 다른 지국원 3명과 함께 검거되었다는 사실이 보도되고 있다.

1933년 10월경에는 『조선일보』에 화가로 참여하였다. 『삼천리』에 실린 초병정의 글(1933, 32쪽)을 보면 『동아일보』와 『조선일보』의 구성원들을 소개하고 있는데, 그중에 화가 이갑기라는 이름도 등장하고 있다. 1932년과 1933년경에는 잡지 『삼천리』(1932년 12월호)나 『대중』(http://db.history.go.kr/url.jsp?ID=ma_64_001_0100 http://db.history.go.kr/url.jsp?ID=ma_64_003_0150, 2009.7.15) 등에 이갑기의 글이 실려 있다. 이때 이갑기가 해당 잡지사 사원으로서 참여한 것인지 외부 필자였는지는 확실치 않다. 1934년 5월경에는 『신동아』의 “잡지기자 좌담회”라는 제목의 좌담에 참여했던 것으로 나오고 있다(정진석, 1995, 262쪽에서 재인용). 따라서 당시에는 잡지사 기자로 활동했던 것으로 보인다. 카프사건으로 구속되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의 판결을 받고 『조선중앙일보』, 1935.12.10, 2면) 이갑기는 만주로 활동 무대를 옮겨 1940년 5월부터 6월 사이에 『만선일보』에 이무영(李無影) 원작의 『여명전후』라는 소설을 개편하여 14회에 걸쳐 연재하였다.

언제, 어떠한 경로로 귀국하였는지는 불확실하지만 일제 말기에는 『부산일보』에 조사부 주사로 근무했다(박경장, 1959, 10쪽). 이갑기는 『민주중보』 내에서뿐만 아니라 좌익 세력이 주도했던 해방정국의 언론계(김복수, 1988)에서도 활발한 활동을 했던 것으로 보인다. 1945년 10월 23일부터 개최된 전조선기자대회에서도 이갑기는 의안 토의에서 연설을 했다는 사실이 언론에 보도되었다(『자유신문』, 1945.10.26).

이처럼 이갑기는 일제기부터 사회주의 사상의 소유자로서 해방 정국의 『민주중보』에서도 활발한 활동을 전개하였다. 그러나 미군정의 정책이 점차 구체화되어 좌익에 대한 탄압이 시작되면서 그의 활동 여지도 축소될 수밖에 없었을 것이다. 그리하여 이갑기는 1948년 4월 남한만의 단독 정부 수립에 반대하여 남북협상에 나서 평양으로 향했던 김구 일행과 함께 동행하였다가 북한에 잔류하였다고 한다(김형두, 1995, 117쪽).

(2) 김형두

김형두는 7인위원회의 총무국장을 맡아 창간에 주도적 역할을 하였으며 1946년 무렵 편집국장을 역임하였고, 후에 『수산신문』(오늘날 『국제신문』의 전신)을 창간하는 데에도 주도적 역할을 하였던 인물이다. 1909년 경남 고성에서 태어나 1926년 진주농교(현 경상대학교)에 진학하였다. 재학 중 사회주의 성향의 학생들 모임이었던 ‘동무사’에 참여하였으며 1927년 진주 지역 학생들의 연합 동맹휴학과 소요 건으로 퇴학 처분을 받고는 일본으로 유학을 갔다. 6개월 뒤 당국이 천황 생일 특별사면의 차원에서 복교를 허용한다는 조처에 복학하였다. 1929년 광주학생의거 당시 진주 소요 사건으로 다음 해 1월에 다시 퇴학당하였다. 그 후 당시 고성에 있던 고성청년동맹에 가입하여 위원장으로

추대되었다(김형두, 1995, 31~62쪽).

1933년 말에는 조선공산당재건동맹사건으로 전국에 270여명이 검거되는 사건의 와중에서 김형두도 수감되어 7개월간 옥살이를 하기도 하였다(『조선공산당재건동맹사건 발각에 관한 건』). 후에 무죄로 풀려나기는 했지만 고성의 청년동맹 관계자 11명과 함께 체포되어 고문을 당하고 옥고를 치렀다.

조직의 장을 맡으면서 경찰의 주목을 받는 인물이 되자 김형두는 활동의 안전판을 위해 신문기자가 되려는 생각을 하게 되었다고 술회하고 있다. 이에 따라 당시 안희제가 운영하던 『중외일보』를 찾아갔으나 곧 문을 닫아야 할 형편이라는 말에 발길을 되돌려야 했다. 고향에 돌아온 김형두는 얼마 뒤 『동아일보』 고성지국 기자로서 기자 생활을 시작하였다(김형두, 1995, 62~64쪽). 김형두는 회고록에서 이때의 시점을 밝히지 않고 있다. 『중외일보』가 경영난으로 문을 닫은 것이 1931년 9월 2일의 일이니(박용규, 1996, 125쪽) 김형두가 동아일보 고성지국 기자가 된 것은 1932년이나 1933년의 일일 것이다.

1935년에는 『매일신보』 기자 생활을 시작하였다. 회고록에서 어느 지국인지를 명시하지는 않았지만 통영, 고성, 거제도, 남해를 관할하였다는 것으로 봐서 통영이나 고성지국이었던 것으로 보인다. 당시 총독부 기관지에 들어가게 된 것을 김형두(1995, 98~99쪽)는 “매우 유감스럽고 마음 내키지 않는 선택이었지만 당시 내 입장으로는 이 길 이외에는 달리 없었고 비록 제약된 조건이긴 하지만 전혀 무의미하지 않게 기자 생활을 할 수 있지 않겠나 하는 것이 내 희망이요, 바램이었다”고 술회하고 있다. 1939년에는 『부산일보』 남부지사의 통신부장(김형두, 1995, 102쪽)으로 옮겨서 일제 말기를 『부산일보』의 기자로서 지내다가 광복을 맞이하게 되었다.

이처럼 김형두는 소지주 출생으로 신식 교육을 거쳐 일본 유학도 하는 엘리트 교육의 과정을 거치면서 사회주의 사상에 젖기도 하였다. 회고록을 통해 김형두는 이 사실을 인정하면서 자기는 사회주의 사상과는 손을 끊었다고 술회하고 있다. 고성청년동맹에 관여하던 어느 날 회관으로 들어가는데 안에서 자신에 관해 열띤 논쟁을 벌이는 소리가 들려 귀를 기울여 보니 자신의 출신 성분이 소지주의 아들이며 부르주아적 인텔리이니만큼 언제 이탈, 배반할지 모르므로 적절히 이용하다가 적당한 기회에 숙청해야 한다는 내용이었다는 것이다. 이를 듣고 배신감에 “불세비키즘과 손을 끊었다”고 한다(김형두, 1995, 70~71쪽).

실제로 그가 이후 『매일신보』에 들어가고 일본인이 경영하던 『부산일보』로 옮긴 경력을 보더라도 이와 같은 서술이 전혀 근거 없는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앞에서 잠시 언급하였지만 그가 회고록을 집필한 것이 1975년경이었음을 감안해서 조심스럽게 받아들일 필요가 있겠다.

(3) 박승표

7인위원회의 영업국장을 맡았던 박승표도 김형두의 회고(1995, 117쪽)에 의하면 좌익적 성향의 인물이었다고 한다. 박승표에 관해서도 자세한 개인사는 확인이 어렵다. 하지만 여러 기록을 토대로 볼 때 경남 함안 출신으로서 일제기 고향에서 청년 활동을 시작했던 것으로 보인다.

1930년 4월에 함안소년동맹이 창립되었는데 그 집행위원장에 박승표가 선임되었다(『동아일보』, 1930.4.5). 같은 해 9월 14일에는 경상남도 소년연맹 제3기 집행위원장으로 선출되었다(『중외일보』, 1930.9.17, 4면). 1931년 12월경에는 함안의 농민조합의 간부도 맡았다. 『중앙일보』 1931년 12월 16일자 2면을 보면 공산당재건사건과 관련하여 검거되었던 청년들 중 농민조합 간부들을 대상으로 혐의로 조사하였으나 무혐의로 석방된 인물 중에 박승표의 이름도 등장한다. 1932년에도 소년동맹 관련

건으로 검거되었다. 『동아일보』 1932년 2월 26일자 2면을 보면 마산경찰서가 인근 지역 청년 단체 간부들을 모종의 사건으로 검거하는 과정에서 박승표도 검거되었다는 사실이 보도되고 있다.

이 직후부터 언론인 경력도 시작된 것으로 보인다. 1933년 12월에는 『조선중앙일보』 함안지국장에 임명되었다(『조선중앙일보』, 1933.12.10, 2면). 이것이 첫 경력인지 아니면 지국원 등을 하다가 지국장을 맡은 것인지는 확실치 않다. 박승표는 함안의 기자들 중에서도 주도적 역할을 했던 것 같다. 1936년 8월 23일 개최된 함안기자동맹 정기총회를 앞두고는 준비위원으로서 활약했다(『조선중앙일보』, 1936.8.6, 2면) 총회에서 기자단으로 조직을 개편하면서 서무부장을 맡았다(『조선중앙일보』, 1936. 8.26).

(4) 이만용

7인위원회 사업국장 이만용은 1946년 대구 10.1사건 호외로 무기 정간을 당하며 이갑기가 구속되고 김형두가 편집국장을 그만두자 운영위원장 겸 편집국장에 취임했다(김대상, 1981, 182쪽). 1948년 전술한 일본인 고위 관료 내한설에 관한 필화사건으로 편집국장을 그만 두었다가 속간될 때 주필을 맡았던 인물로서 『민주중보』 초창기 핵심적 인물 중의 한 사람이다.

그는 1909년 10월 15일 부산 출생으로 일본 관서대학을 졸업하였으며 일제 말기 부산일보 기자로 근무하였다(국사편찬위원회 한국사데이터베이스 중에서 ‘근현대인물자료’ 참조). 경력에 관해서는 제한된 정보밖에 없지만 일본 유학을 했다는 점이 눈길을 끈다. 일제기 일본 유학생들이 한국 사회에 사회주의 사상이 유입되는 주된 통로였다는 점을 생각하면 이만용도 유학 시절 사회주의 사상을 접했을 가능성도 상당히 높다고 볼 수 있겠다.

(5) 최천택

최천택(崔天澤)은 1948년의 필화로 무기 정간을 당한 후 속간되면서 사장을 맡았던 인물이다. 1897년 6월 1일 부산에서 출생하여 청년운동과 신간회 운동에 참여했던 것으로 보인다. 1922년과 1925년 사이에 부산청년회, 부산청년연맹에 참여하면서 몇 차례 옥고를 치르기도 하였다. 1920년 9월에는 박재혁(朴載赫)의 부산경찰서 투탄(投彈)사건에 연루되어 체포되었으며 1923년 7월에는 의열단의 활동을 도와 군자금 모집에 참여하였고 같은 해 9월에는 일본의 관동대지진을 기뻐하며 축배를 들다 체포된 것으로 기록되어 있다(『공훈전자사료관 포상자 공적조서』, 참조 http://e-gonghun.mppva.go.kr/portal/web/merit/search_merit_view.jsp?manage_no=90834&judge_case_item_cd=200300_SSG00005_90834&keyword=, 2009.7.16). 1927년 7월 30일에 출범한 신간회 부산지회의 서무부간사를 맡았다(『조선일보』, 1927.8.2, 조간 2면). 서무부 간사라면 실무에서 중추 역할을 했을 것이다. 1929년 2월 13일에 열린 신간회 부산지회 정기대회에서는 회장에 선출되었다(『동아일보』, 1929.2.15, 4면).

이처럼 최천택은 일제기 민족운동에 참여한 인물이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이것만으로 그의 사상적 성향을 추정하기는 어려울 것 같다.

(6) 그 밖의 참여 인사들

7인위원회 평위원 석광수에 관해서는 1946년 4월 25일에 개최된 제2회 전국신문기자대회에 『민주중보』를 대표하여 준비위원회 연락부에 참여하였다는 사실이 『서울신문』 1946년 4월 17일자 지면에 보도되었다. 이 기자대회를 주최한 것은 조선신문기자회로서 군정기에 가장 먼저 생긴 언론인 단체였

다. 1945년 10월 23일에 개최된 제1회 전국신문기자대회에서 조선신문기자회의 결성을 선언하였다. 당시의 전반적 정국이나 언론계 판세를 반영하여 이 단체도 좌익이 주도하였다(박용규, 2007). 이 기자대회에 참여하여 준비위원회의 역할을 맡은 것을 보면 석광수도 당시 좌익 성향이었을 가능성이 크다. 석광수는 『민주중보』에 오래 근무하지는 않았고 1946년 5월 3일자로 창간된 『부산신문』의 편집국장으로서 옮겼다(부산직할시사편찬위원회, 1991, 552쪽).

1948년 8월 속간되면서 신임 편집국장을 맡았던 강재은(姜在殷)은 1931년 1월 1일부로 『동아일보』 동래지국이 신설한 서면분국의 분국장으로 임명(『동아일보』, 1931.1.3, 7면)되었다가 같은 해 5월 1일자로 그만 두었다(『동아일보』, 1931.5.6, 3면). 그 이후에는 『조선중앙일보』의 부산지국 기사를 하다가(『조선중앙일보』, 1933.9.2, 5면, 『국민보』, 1937.2.10, 2면) 일장기 말소 이후 폐간되자 다시 1937년 12월 1일부로 『동아일보』 부산지국 기자로 임명되었다(『동아일보』, 1937.12.11, 8면). 한편 1929년 9월경에는 신간회 부산지회 집행위원으로 참여하였다(『중외일보』, 1929.9.25, 3면).

이밖에도 『민주중보』 편집에 참여했던 인물로는 『부산시사』에 의하면 조병중(曹秉宗), 조필규(趙必奎), 장수봉(張壽奉) 등이 있었으며 김형두 회고록(1995)에 따르면 이소조(李小祚)가 7인위원회에 공무국장으로서 참여하였으며 그 외에 조기호(曹基鎬), 성병규(成炳奎) 등이 창간 당시부터 근무하였고 후에 조창수(趙昌洙), 백탁기(白鐸基), 윤임술(尹任述) 등이 보강되었던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하지만 이들에 대해서는 별다른 자료가 없고 또 당시 신문 편집 방침에 영향을 미치기는 어려웠을 것으로 보여 본 논문의 분석에서는 제외하였다.

(7) 참여 인물들의 이념 성향

지금까지 이갑기를 비롯해서 초창기 간부들 7명의 경력과 이념 성향을 분석해 보았다. 이 중 확인되는 것은 이갑기와 김형두 밖에 없었지만 초창기 『민주중보』가 구 『부산일보』 출신들에 의해 주도되었다는 정황을 고려할 때 나머지도 대부분 일제 말기 『부산일보』에 근무했던 인물로 보아야 할 것이다. 또한 이들은 『부산일보』 이전에 한국인들이 발행하던 민간지의 영남 지방 지국에 근무하면서 언론인으로서의 경력을 쌓았다는 사실을 알 수 있었다. 이러한 언론 경력과 함께 대부분 지역의 청년단체나 사회운동 단체에 참여하여 민족운동에 참여했다는 점을 공통적으로 발견할 수 있었다.

이들 중에 『민주중보』에 참여했던 당시에 좌익 성향이 분명했던 사람으로는 이갑기와 박승표, 석광수의 세 사람 정도인 것 같다. 이만용과 최천택, 강재은은 일본 유학을 하였거나 신간회에 참여하는 등 민족운동 경력은 있지만 그 사상적 성향을 단정 짓기는 어려울 것이다. 다만 이 인물들 중 유일하게 회고록을 남긴 김형두는 전술한 바와 같이 청년 시절 사회주의 사상에 심취하기도 하였지만 주변 동료들이 자신의 출신 성분을 의심하는 것을 보고 이와 결별하였다고 회고하고 있다.

창간 초기 편집국의 내부 인적 구성과 분위기에 대해 김형두(1995, 128쪽)는 자신이 편집국장을 맡게 된 배경과 과정을 술회하면서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이때는 이미 사원들마저 좌익 사상에 물이 들어있어 다루기가 여간 어려운 분위기가 아니었다. 사원들은 이미 세파로 분열되어 으르렁거리고 있었다.

첫째가 모 정당에서 추천해 업무국장으로서 앉힌 사람을 따르는 파요, 둘째가 남로당과 인민공화당⁸⁾을

8) 이 부분은 김형두의 기억이 정확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중보』가 창간 초기라 할 1945년경에 남로당이나 인민공화

따르는 계열, 그리고 세 번째가 우익 계열이었다.

이들 세 계파에서는 서로 자기 세력을 확산하기 위해 혈안이 되어 있었고 ... (후략) ...

김형두가 편집국장을 맡게 된 것은 회고록에서도 시점을 명기는 하지 않고 있다. 하지만 해방 후 5개월여가 지나서 장질부사로 3개월 정도를 쉬었으며 그 이후 편집국장으로 복귀하였다는 회고(김형두, 1995, 123~127쪽)에 따르면 1946년 3월 전후한 때부터 편집국장을 맡았다는 말이 된다. 이즈음 『민주중보』 내부의 분위기가 여러 사상 및 정치적 배경을 가진 사람들이 함께 있던 상황이었지만 사회주의 사상의 소유자들이 많았음을 말해 주고 있다.

이러한 기록으로부터도 우리는 『민주중보』의 인적 구성에서 비롯된 내부적 분위기가 좌파 성향이 우세했던 것으로 추정할 수 있겠다. 그러나 이들도 월북했던 이갑기를 제외하고는 투철한 좌파 성향이었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이다. 무엇보다도 이들이 일제 말기 일본인들의 『부산일보』에 근무했던 사람들이라는 점이다. 당시 많은 언론인들이 이러한 길을 갔지만 이는 현실과 타협한 결과였다고 해석할 수 있는 것이다. 또한 『민주중보』에 참여했던 인사들 중 최천택, 이만용, 성병규, 장수봉 등은 정부 수립 이후 전향한 좌익 인사들이 중심이 된 국민보도연맹 경상남도연맹에 발기위원으로 참여하였다(『민주중보』, 1949.11.12). 이러한 사실들로 볼 때 미군정기 『민주중보』 참여 인물들의 전반적 이념 성향은 온건한 좌파가 다수였다고 평가할 수 있겠다.

3. 『민주중보』의 지면에 나타난 이념 성향

1) 조선공산당의 신탁통치 지지 선언에 관한 보도 태도

(1) 『민주중보』의 보도 태도

잘 알려진 바와 같이 1945년 12월 27일 한국에 5년간 신탁통치를 실시한다는 내용이 AP통신을 인용해 『동아일보』에서 보도하면서 한국 사회는 민족적 자존심의 문제라며 신탁통치 반대 운동이 급격히 확산되어 갔다. 그러나 1946년 1월 2일 조선공산당이 신탁통치 지지 선언을 하자 좌익 언론들은 찬탁으로 논조를 선화하면서 언론 부문에서 첨예한 좌우 대립이 전개되었다. 여기서는 이 조선공산당의 지지 선언을 『민주중보』를 비롯한 당시 언론들이 어떻게 보도하였는지를 비교, 분석해 보려고 한다.

『민주중보』도 1945년 12월말의 지면에서는 신탁통치를 강도 높게 반대하였다. 12월 29일자 1면 3단에 “신통(信統)은 절대반대”라는 제목으로 국민당이 신탁통치 반대 결의문을 발표했다는 보도를 시작으로 30일자부터 본격 보도하기 시작하였다. 1면 톱기사는 12월 28일 발표된 모스크바 3상회의

당은 없었다. 남로당이 창립되는 것은 1946년 11월이며 인민공화당은 조선민족혁명당이 1946년 6월에 개칭한 것이다.

9) 삼상회의 결정 내용에 대한 공식 발표보다 하루 먼저 나온 이 보도는 오보였던 것으로 밝혀졌다. 사실과 다르게 소련이 신탁통치를 주장했다는 식으로 보도하여 국내 각계에 반탁과 반소의 물결이 회오리치게 만들었다. 군정기 초반 좌익이 주도하던 정국이 이를 통해 좌우익 대립이 첨예화되면서 점차 군정 정책과 함께 우익이 주도권을 확장시켜 나가게 된다. 이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정용욱(2003)과 김영희(2000)를 참조하기 바람.

결정 내용을 자세히 보도하였다. 1면의 좌측에는 “해(海)내외일치 「신탁통치」 절대반대의 낭화(狼火)”라는 5단의 제목으로 신탁통치 반대 운동의 열기를 자세히 전하였다. 2면도 ‘신탁통치 배격대회 개최/살어도 가치 살고 죽어도 가치 죽자’는 3단의 제목으로 반탁 대회의 상보를 톱으로 전하였다. 31일 발행한 호외는 거의 전 지면이 반탁에 관한 내용이었다. “탁치반대국민총동원”이라는 주제로 임시정부가 전국적인 반대 운동 조직에 들어간 것에 대한 상보를 필두로 여러 관련 기사들로 지면을 장식하였다. 2면에서는 “사투하자 삼천만! 신탁통치 절대배격”이라는 슬로건을 지면 상단에 통단으로 게재하고 전면에 걸쳐 반대 운동의 열기를 전하였다.

조선공산당의 지지 선언 이후 『민주중보』의 보도 태도는 바뀌었다. 찬탁으로 선회한 것은 아니었지만 반대의 톤은 낮아지고 차분한 논조를 보여주기 시작하였다. 1월 3일자 ‘탁치사태와 배격운동’이라는 제목의 사설에서 반대 입장을 여전히 강조하면서도 연합국에 신탁통치를 정당화 시킬 빌미를 주지 않도록 좀 더 성숙한 대응이 필요하다고 주장하였다. 이와 함께 1945년 12월 30일부터 시작된 조선인민공화국 중앙인민위원회와 임시정부의 통일전선 구성 시도를 자세히 보도하며 기대감을 표하였다.

조선공산당의 발표 내용은 1월 4일자 1면 중앙에 2단 기사로 보도하였다. ‘민족분열을 경계/탁치를 잘못 알지 말라’는 제목으로 “공산당에서는 이번 신탁통치를 제국주의적 탁치로 잘못 알지 말고 급속히 민주주의적 민족통일전선을 구성하자고 다음과 기쁜 성명을 발표하였다”는 서두와 함께 성명 전문을 보도하였다. 이어 ‘무질서한 철시파업은 대중의 생활위협’이라는 제목으로 공산당 중앙위원회의 발표 내용도 전하였다.

이후에도 반탁 운동의 주요 사건이나 경과는 지면에 보도하였다. 1월 5일자 2면을 보면 탁치배격부 산위원회가 시급한 현정세에 대처하기 위해 조만간 민족통일의 추진력이 될 기관으로 승화시키기로 했다는 내용을 톱기사로 보도하였다. 같은 2면에는 부산의 학생들도 반탁운동에 참여하기 시작했다는 내용을 사진과 함께 보도하였다. 1월 6일자도 2면에 “외모(外侮)를 계기로 결집하는 통일력”이라는 제목으로 마산, 울산 등 경남 지역에서 벌어지는 반탁운동의 경과를 전하였다. 1월 7일자에서는 “탁치 반대투쟁은 어찌케 전개하나”라는 제목으로, 8일자에서는 “팻쇼세력 철저타도”라는 제목으로 조공 경남위원회의 성명 전문을 2회에 걸쳐 게재하였다.

이처럼 『민주중보』는 신탁통치에 대해 처음에는 강도 높은 반탁의 논조를 보여 주었지만 1946년 1월 들어서 조선공산당의 발표를 계기로 반대의 강도는 다소 완화되고 보다 성숙하게 대응해야 한다는 논조를 보여 주었음을 알 수 있다.

(2) 다른 신문들의 보도 태도

『동아일보』는 『민주중보』와 아주 상반되는 보도 태도를 보였다. 1946년 1월 들어서도 계속 반탁을 강도 높게 주장하였다. 박헌영이 발표한 조선공산당의 입장에 대해서는 1946년 1월 5일자 우측 중간에 “탁치는 국제협력/조공의 태도표명”이라는 1단 제목으로 발표 내용의 일부를 발췌, 보도하였다. 반면 이에 대한 비판은 이 날짜 지면부터 뒤덮다시피 했다. 1면 톱은 “탁치지지는 독립부인”이라는 가로 제목에 “진정한 애국자라면/통일전선에 협력하라/파쇄하자 일부의 교란자”라는 세 줄의 4단 제목으로 찬탁을 선동적으로 비난하는 기사를 게재하였다. 이어 신탁반대국민총동원서울위원회와 한민당, 국민당, 신한민족당 등 각계에서 나온 찬탁 반대 성명을 자세히 보도하였다. 사설에서도 “자아모독을

격(擊)함”이라는 제목으로 찬탁을 강한 논조로 비난하였다. 『동아일보』는 그 후에도 상당 기간 찬탁을 비난하고 반탁 열기를 상세히 보도하는 논조를 지속하였다.

한편 중도로 평가되는 『서울신문』도 1945년 12월말에는 반탁의 논조가 두드러졌다. 12월 29일자 1면을 보면 면 중앙에 “질서있게 투쟁! 신탁통치절대반대/동포상쟁은 금물, 혼란과 자멸 초치할 썬”이라는 슬로건을 박스 처리하여 신고 있으며 톱기사 등 여러 기사를 통해 반탁 운동의 열기를 보도하였다. 1946년 1월 1일자도 면 중앙에 “신춘벽두·맹서하자! 탁치철폐”라는 구호를 검은 컷과 함께 배치하고 여러 관련 기사를 게재하였다.

조선공산당의 발표 내용은 1월 8일자에 게재되었다. “통일에 적극적계기”라는 2단의 두 줄 제목으로 그 내용을 상세히 보도하였다. 대신 『서울신문』은 이즈음 임시정부와 조선인민공화국 사이에 시도되던 좌우합작에 대해 ‘일대 서광’, ‘청신호’(1월 4일자 1면) 등의 용어와 함께 커다란 기대감을 표시하며 지면의 상당 부분을 할애하였다. 『서울신문』도 반탁의 논조는 다소 완화되었지만 철회한 것은 아니었다. 반탁운동의 주요 경과는 계속 보도하였다(예컨대 1월 14일자 2면).

한편 조선공산당 중앙위원회 기관지였던 『해방일보』는 전혀 다른 보도 태도를 보였다. 1945년 12월말 거의 전사회적으로 반탁의 물결이 회오리칠 때에도 『해방일보』는 모스크바 3상회의 관련 내용을 보도하지 않았다. 조선공산당의 발표 이후인 1946년 1월 6일자에서 1면 중앙에 “삼상회의 결정 절대 지지”라는 슬로건을 박스 처리하여 게재하였다. 사실에서는 “삼국의 원조협력이 신탁을 의미함”이라는 제목으로 삼상회의의 결정이 또 다른 식민지배가 아니라 원조 협력을 의미하는 것이라는 입장을 자세히 설명하였다. 또한 “모스크바삼상회의 진보적/조선공산당 지지 표명”이라는 제목으로 조선공산당의 발표 내용을 상세히 전하였다. 이어 “삼국외상회의의 조선에 대한 결의의 해설”이라는 제목의 해설 기사를 6일과 8일자 이틀에 걸쳐 게재하였다. 12일과 15일자에는 “막부삼상회담의 결정/우리는 어떻게 인식할 것인가?”라는 제목으로 2회에 걸쳐 해설 기사가 실려 있다.

2) 정판사 위조지폐 사건에 대한 보도 태도

(1) 『민주중보』의 보도 태도

조선공산당이 위조지폐를 발행하였다는 이른바 정판사 위조지폐사건은 1946년 5월 15일 군정청 공보부의 발표로 알려지게 되었다. 『민주중보』는 이 사건을 1946년 5월 18일부터 보도하였다. 18일자 1면 우측 중간에 “위조지폐사건진상”이라는 2단 크기의 두 줄 제목으로 공식 발표 내용을 사건의 개요와 함께 조선공산당원이라고 발표된 정판사 사원 14명의 명단도 보도하였다. 바로 이어서 우측 하단에 역시 2단 크기의 “위폐사건에 대하여/박헌영 씨 군정장관 방문”이라는 두 줄 제목으로 이번 위조지폐 사건은 조선공산당과 무관하다는 박헌영의 주장을 보도하였다. 이를 보도하면서도 박헌영의 주장 내용이 아니라 군정청 방문 사실을 제목으로 뽑는 신중한 보도 태도를 보였다. 이를 끝으로 『민주중보』 지면에서 정판사 위조지폐사건 관련 기사는 더 이상 찾아볼 수 없다.

(2) 다른 신문들의 보도 태도

한편 『동아일보』는 상반된 보도 태도를 보였다. 5월 16일자 2면 톱으로 “지폐위조사건진상전모”라는 4단의 네 줄 제목으로 공보부의 발표 내용을 정판사 소재 빌딩 사진과 함께 자세히 전하였다.

17일에도 1면 사설에서 “자기비판에의 기대”라는 제목으로 조공을 강도 높게 비판하였으며 독립촉성 국민회의의 비난 성명 내용도 보도하였다. 2면은 “백일하에 폭로된 공산당 지폐위조사건의 죄상”이라는 가로 통단의 첫 제목과 함께 거의 전면을 관련 기사로 채웠다. 18일 1면에도 각계의 반향을 보도하고 2면에는 톱기사로 “위조지폐와 우는 사람들!”이라는 4단의 제목으로 이 사건이 각계에 미친 여파를 자세히 보도하였다. 이 사건과 관련된 보도는 5월 20일경까지 이어졌다.

『해방일보』는 전혀 다른 보도 태도였다. 15일의 공보부 발표 내용은 전혀 보도하지 않고 17일자부터 이를 반박하는 기사가 줄을 이었다. 17일자 1면 중앙에 “반동배의 정치적 모략과 폭행을 분쇄하자”는 구호를 박스 처리하여 게재하고 ‘주장’이라는 난을 통해 1면 상단에 “폭풍에 항(抗)하야”라는 제목으로 입장을 발표하였다. 공산당은 그동안 수많은 고난과 모략을 이겨냈으며 이번 사건도 모략에 불과하다면서 “추잡한 모해와 중상은 분명히 그 정체를 들래고야 마리라는 것을 확신한다”고 주장하였다. 1면 좌측에는 조선공산당 중앙위원회의 성명을 게재하였다. 2면에서도 “무고와 중상의 포위를 쏘코”라는 제목의 톱기사로 박헌영이 군정장관을 방문하여 의견서를 제출하고 공명정대한 진상 규명을 요청했다는 사실을 보도하였다.

18일도 관련 기사가 계속되었다. 피신했던 이관술과 권오직¹⁰⁾ 두 사람이 제출한 “삼천만동포에게 소(訴)함”이라는 제목의 문서를 1면 톱에 게재하였다. 이 글을 통하여 두 사람은 자신들은 전혀 위조지폐에 가담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였다. 2면에서도 이번 사건은 공산당과 무관함을 주장하는 여러 형태의 기사가 지면을 채웠다. 이 날 발행을 끝으로 『해방일보』는 5월 18일부로 폐간되었다.

『서울신문』은 발표 다음 날인 5월 16일자 2면 좌상단에 2단으로 보도하였을 뿐이다. “위조지폐단에 대해”라는 제목으로 사건에 대한 발표 내용을 간략히 보도하였을 뿐, 이후의 지면에서 관련 기사를 찾아볼 수 없다.

『독립신보』는 16일자 1면 제호 바로 아래 공보부 발표를 2단으로 보도하고 이어 공산당의 반박 성명도 2단으로 보도하였다. 17일자는 1면 중앙에 1단으로 박헌영이 군정장관을 방문한 사실을 보도하였다. 이후에도 공동조사위가 결성되었으며 이주하가 경찰부를 방문했고, 이관술, 권오직 두 사람의 성명 소식(5.18, 2면)과 『해방일보』와 그 빌딩이 폐쇄되었으며 이에 대해 조공이 성명을 발표했다는 소식(5.20, 2면), 군정장관의 관계자 엄벌 방침을 발표한 내용과 이에 대한 조공의 성명(5.22, 2면), 『해방일보』의 속간을 청원했다는 내용(5.23, 2면) 등 사건의 경과를 단신 위주로 보도하였다.

3) 1946년 9월 노동자 총파업에 대한 보도 태도

(1) 『민주중보』의 보도 태도

1946년 9월 23일 부산 철도노조는 근로조건 개선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자 파업에 들어갔다. 이를 계기로 다른 지역의 철도 노동자들도 가세하면서 조선노동조합전국평의회는 24일 남조선총파업 회원투쟁위원회를 조직하여 26일에는 ‘총파업투쟁선언서’를 발표하고 노동조건에 대한 구체적인 요구 조건을 내걸었다. 이어 전국의 철도 노동자뿐만 아니라 출판, 부두, 피혁, 기계 등 여러 부문의 노동자들이 참여하면서 9월 총파업이 벌어졌다(성한표, 1985).

10) 두 사람은 당시 조선공산당 중앙집행위원이면서 이관술은 당 총무부장 겸 재무부장, 권오직은 해방일보사 사장을 겸하고 있었다(『동아일보』, 1946.5.16).

이 파업을 『민주중보』는 9월 24일부터 보도하였다. 1면에는 “파업권문제”라는 제목의 사설을 게재하였다. 보존 상태가 워낙 안 좋아 내용 파악이 어렵지만 “민주주의적 해결이 잇서야 할줄 맞는다”고 끝맺고 있다. 2면에는 관련 내용을 상세히 보도하였다. 톱기사로 “아사(死)의 철문에 분쇄될기”로 시작하는 4단의 세 줄 제목으로 파업 돌입 사실을 보도하였다. 좌측에는 “생존권 전취하련다!”라는 제목으로 파업 배경과 요구 조건, 성명서를 게재하였으며 뒤를 이어 “사건경위와 해결책 타합(打合)”이라는 1단 제목으로 군정청 당국자가 간부들을 만난 사실을 보도하였다. 이 보도들은 매우 자극적인 제목을 달고 있으며 파업 노동자들의 입장에 서고 있다는 판단을 가능케 한다.

25일에도 2면 톱으로 “철도파업의 해결은 언제”로 시작하는 세 줄의 3단 제목으로 속보를 게재하였다. 좌상단에는 “요구 불응엔 사직”이라는 제목으로 파업 지도부의 강경한 대응 자세를 보도하였으며 이어서 “5관계자 피검”, “2열차 운전”, “인사행정 조사” 등의 제목으로 1단 짜리 관련 기사가 뒤를 이었다.

26일에도 2면에 관련 보도가 이어졌다. 면 톱으로 “38이남 동맥수고갈(遂涸!)”로 시작하는 두 줄의 가로 제목으로 전국으로 확산된 철도 파업 현황을 보도하였다. 이어서 “중공업도 요구제출”, “서울에서만 24건/전평, 노동자권리 옹호 성명”이라는 제목으로 파업의 확산과 각계의 지지 성명 현황을 보도하였다. 파업이 불법이라는 군정장관의 발표 내용도 3단의 세 줄 제목으로 보도하였다.

27일자에도 2면 톱으로 “서울출판노조도 파업”이라는 3단의 두 줄 제목으로 출판노조의 파업 동참 소식을 전하였다. 이어 “철도파업을 적극적 지지”, “문제해결엔 단(單)승인”, “대구우편국도 파업 단행!” 등의 제목으로 노조의 입장과 파업의 확산 및 지지 소식을 보도하였다. 28일에는 1면에 하지중장의 방송 연설 내용을 “철도파업에 대하여”라는 2단의 중립적 제목으로 보도하고 2면에는 파업 확산 소식을 계속 보도하였다. 면 톱으로 “4국(局)합류의 기세/철도총파업거의(去益)확대”라는 제목으로 보도하였으며 이어 “해사국(海事局)도 요구”라는 제목으로 파업이 확산되어 가는 소식을 전하였다. 이러한 보도 태도는 전술한 바와 같이 『민주중보』가 10·1사건 호외 발행으로 무기정간 당할 때까지 계속되었다.

(2) 다른 신문들의 보도 태도

『동아일보』는 9월 25일자 2면 톱으로 파업 소식을 전하였다. “식량, 대우문제로 전종업원 농성”이라는 4단의 세 줄 제목으로 파업 돌입 소식을 전하면서 “이번 파업은 불법이다”라는 제목으로 군정장관의 말도 보도하였다. 9월 26일부터는 출판노조의 파업으로 휴간하였다. 속간된 10월 4일자 2면에서 “철도파업과 기(其)후동태”로 시작하는 세 줄 제목으로 휴간 기간 동안의 파업 경과를 보도하였다. 10월 5일과 6일자에서는 사설을 통해 파업에 대한 입장을 개진하였다. “주지는 시(是)나 방법은 죄”라는 5일자 사설에서 이번 파업은 시기와 형태, 의도, 방법 4가지 과오를 저질렀다고 비판적 입장을 보였다. 6일자 사설에서는 “왕패(王霸)병용”의 방도”라는 제목으로 이번 파업이 국제정치의 맥락에서도 적절치 않다고 비판하였다.

『서울신문』도 25일부터 보도를 시작하였다. 2면 톱으로 “법령에 의해 행동하면/언제나 문제를 해결”이라는 제목으로 군정장관의 입장을 보도하고는 여러 관련 기사가 뒤를 이었다. “운수부철도국 종업원 파업”이라는 2단 제목으로 파업 현황을 보도하였으며 “각선 거개운휴”라는 제목으로 철도 중단 현황을, “부산지구 만 명은/23일 오전 파업”이라는 제목으로 시발이 된 부산의 현황을 보도하였

다. 이어 “하지 장군에/전평서 서한”, “미인 부장이 말썸” 등의 제목으로 관련 사실을 간략하게 보도하였다. 9월 26일부터는 『서울신문』도 출판노조의 파업으로 휴간하였다. 속간된 10월 5일자에서는 “복구된 철도운행”, “82대를 운전”, “전신전화복구”, “철도국 출근율”, “여행제한을 해제” 등 파업의 경과와 회복 과정에 관련된 기사를 중심으로 보도하였다.

『독립신보』도 25일부터 보도를 시작하였다. 면 톱으로 “조선철도총파업”로 시작하는 3단의 세 줄 제목으로 파업의 경과를 보도하였고 이어 “예고 없는 파업은 불법”이라는 군정장관의 담화를 보도하였다. 속간된 10월 4일자에서는 1면 톱으로 “파업해결대책 세우라”는 제목의 여운형이 발표한 담화 내용을 보도하였다. “파업의 전망”이라는 제목의 사설에서는 파업은 근로대중의 정당한 권리라면서 이번 파업의 근본 원인인 식량문제보다 근원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주장하였다. 이후에도 10월 10일경까지 관련 후속 보도가 이어졌다.

4) 지면에 나타난 『민주중보』의 이념 성향

이상 3가지 사건에 대한 신문들의 보도 태도를 분석해 보았다. 우선 조선공산당의 신탁통치 지지 발표 보도에서 『민주중보』의 보도 태도는 양 극단의 『동아일보』나 『해방일보』와 아주 대비되는 것이었다. 공산당의 발표에도 관심을 기울이면서도 찬탁으로 전환한 것도 아니고 무조건적인 반탁보다 성숙한 대응이 필요하다는 논조를 보인 것은 중립지로 평가되는 『서울신문』의 보도 태도에 가깝다고 할 수 있다. 다만 좌우합작에 더 많은 관심을 기울였던 『서울신문』에 비해 『민주중보』는 신탁통치 문제에도 계속 관심 있게 보도했다는 점에서 구분된다.

이러한 성향은 정판사 위조지폐사건에서도 나타났다. 『민주중보』는 『서울신문』과 같이 최소한의 사실만을 보도하였다. 이는 좌익지로 평가되는 『독립신보』가 사건 관련 속보를 꾸준히 보도했던 것보다 차별성을 보여준다. 이 사건에 대한 『민주중보』의 보도 태도도 중립적이었다고 평가할 수 있을 것이다.

9월의 총파업에 대해서는 『민주중보』가 다른 신문들보다도 훨씬 적극적이었다. 건수나 양에서 다른 신문들보다도 더 많았다. 이는 특히 서울에서 발행되던 신문들이 출판노조의 파업으로 휴간하였지만 『민주중보』는 휴간이 없었다는 점과 파업이 부산에서 시발되었다는 점도 크게 작용했을 것이다. 보도의 논조를 보면 한 번의 사실을 비롯하여 보도 기사의 제목 뽑는 방식 등을 볼 때 파업 노동자의 입장에 서는 보도가 대부분이었다. 이러한 보도는 중립적으로 파업의 경과와 회복 과정을 보도했던 『서울신문』과는 다소 차이가 있고 오히려 『독립신보』의 논조와 비슷했다고 볼 수 있겠다.

이처럼 세 사건에서 나타난 보도 태도로 볼 때 『민주중보』 지면에 나타난 이념 성향은 중도적인 것이 많았으며 사안에 따라서 좌익지로 볼 수 있는 보도 태도를 보인 것으로 평가할 수 있겠다.

4. 맺음말

지금까지 미군정기 부산 최대 신문이었던 『민주중보』의 참여 인물과 지면의 보도 태도에 대한 분석을 통해 이념 성향을 알아보았다. 참여 인물 중에도 과거 사회주의 운동 경력이 있는 사람들이

적지 않았지만 대부분 일제 말기 『부산일보』에 근무하는 현실적 타협의 노선을 걸었던 사람이기에 그들의 이념이 투철한 좌익이었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이다. 지면에 나타난 보도 태도는 비교 대상 신문 중에는 중도라 평가되는 『서울신문』의 논조에 제일 가깝다고 볼 수 있다. 다시 말해 중립적인 성향 중심이면서 사안에 따라서 좌익 성향의 논조도 보여 주었다. 이러한 사실을 종합하면 『민주중보』의 성향은 중립이면서도 약간 좌편향을 보여주는 중도 좌익 언론이었다는 결론이 가능할 것이다.

창간 주역들 중 가장 좌파 성향이 강했던 것으로 보이는 이갑기는 7인위원회 위원장 겸 편집국장 등 핵심적 중책을 맡았지만 오래 가지는 못했으며 신문 활동에 그다지 적극적이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김형두의 회고(1995, 122쪽)에 의하면 이갑기는 회사에 출근하지 않은 경우가 많았다는 것이다. 그래서인지 확실치 않지만 곧 편집국장을 김형두(1995, 127쪽)가 ‘S씨’라고 표현했던 사람에게 넘겼으며 1946년 상반기쯤부터 김형두가 편집국장을 맡았던 것 같다. 이러한 과정을 거치면서 지면의 중립적 태도가 나타날 수 있었던 것으로 볼 수 있겠다.

본 연구는 그동안 미군정의 자료에 의존하거나 지면을 통해서 표방하던 원칙, 관계자들의 회고에 의존하여 언론의 이념 성향을 평가하던 것을 구체적이고 실증적인 방법을 통해 검증해 보았다는 데서 의의를 찾을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연구를 통해 미군정기 부산, 나아가서 지역 언론에 대한 논의의 지평을 조금이라도 넓힐 수 있기를 기대해 본다. 다만 참여 인물에 대한 자료의 부족과 보존된 신문의 부족, 지면의 상태 등 현실적 요인 때문에 좀 더 체계적인 분석이 이루어지지 못한 아쉬움이 있다. 앞으로 새로운 자료의 발굴을 통해 보다 체계적인 연구가 필요할 것이다.

Ⅰ 참고문헌

- 강대민 (2003). 『부산지역 학생운동사』. 서울: 국학자료원.
- 계훈모 (1979~1987). 『한국언론연표I-III』. 서울: 관훈클럽신영연구기금.
- 광주언론인동우회 (1991). 『광주전남언론사』. 광주: 광주언론인동우회.
- 국가보훈처 공훈전자자료관 <http://e-gonghun.mpva.go.kr/>
- 국가통계포털 www.kosis.kr
- 국립중앙도서관 전자도서관 <http://www.dlibrary.go.kr/WONMUN/>
- 국사편찬위원회 한국사데이터베이스 <http://db.history.go.kr/>
- 경남대극동문제연구소 편(1993). 『지방미군정자료집』. [http://kiss.kstudy.com/search/detail_view.asp?Session\(“cust_key”\)=Session\(“cust_key”\)&Session\(“free01”\)=Session\(“free02”\)=Session\(“free03”\)&key=16389,2009.7.7](http://kiss.kstudy.com/search/detail_view.asp?Session(“cust_key”)=Session(“cust_key”)&Session(“free01”)=Session(“free02”)=Session(“free03”)&key=16389,2009.7.7).
- 김기태 (2001). 『언론실록: 1980년 이후 광주·전남 언론사』. 서울: 도서출판 다지리.
- 김남식·이정식·한홍구 엮음 (1988). 『한국현대사 자료총서3-5』. 서울: 돌베개.
- 김대상 (2004). 『부산언론사의 재조명: 신문언론과 방송언론의 맥락』. 부산: 뉴워즈사.
- _____ (1981). 『부산경남언론사연구』. 서울: 대왕문화사.
- 김민환 (2001a). 『해방일보』와 『노력인민』의 사회사상. 한국언론학회 2001봄철정기학술대회 발표논문.
- _____ (2001b). 『미군정기 신문의 사회사상』. 서울: 나남.
- _____ (1996). 『한국언론사』. 서울: 사회비평사.
- 김복수 (2005). 미군정 언론정책과 언론통제. 한국언론학회 광복60주년 기념학술회의 『광복과 한국언론의

형성』 발표논문.

- _____ (1991). 미군정의 언론정책과 한국언론의 형성에 관한 연구. 한양대대학원박사학위논문.
- _____ (1988). 미군정하 언론에 대한 연구: 신문을 중심으로. 『정신문화연구』 통권 제35호, 173~192쪽.
- 김세철 외. 『지역사회와 언론』. 서울: 커뮤니케이션북스.
- 김영재 (2003). 『대구경북언론사』. 서울: 커뮤니케이션북스.
- 김영희 (2005). 미군정기 농촌주민의 미디어 접촉양상. 『한국언론학보』 제49권 1호, 324~364쪽.
- _____ (2000). 미군정기 신문의 보도경향: 모스크바 3상회의 한국의정서 보도를 중심으로. 『한국언론학보』 44-4호, 32~60쪽.
- 김형두 (1995). 『신문과 나의 반생』. 서울: 조선문화사.
- 문중대 (1989). 미군정기 신문의 이데올로기 구조화과정에 대한 연구. 서강대대학원석사학위논문.
- 박경장 편 (1959). 『부산언론계현세(現勢)』. 서울: 의원구락부사.
- 박용규 (2007). 미군정기 언론인단체들의 특성과 활동. 『한국언론학보』 제51권 6호, 12월, 135~162쪽.
- _____ (1996). 일제하 시대·중외·중앙·조선중앙일보에 관한 연구: 창간 배경과 과정, 자본과 운영, 편집진의 구성과 특성을 중심으로. 『언론과정보』 제2호, 109~148쪽.
- _____ (1988). 미군정기 한국 언론구조의 형성과정에 관한 연구. 서울대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미군정활동보고서』(영인본, 서울: 원주문화사, 1990).
- 박정규 (1997). 한국지방신문의 역사. 김세철 외. 『지역사회와 언론』. 서울: 커뮤니케이션북스, 60~94쪽.
- 부산일보사사편찬위원회 (1985). 『부산일보사사 1946~1984』. 부산: 부산일보사.
- _____ (1991). 『부산시사』. 부산: 부산직할시.
- 성한표 (1985). 9월총파업과 노동운동의 전환. 강만길 외 편. 『해방전후사의 인식 2』. 서울: 한길사, 359~401쪽.
- 역사문제연구소 문학사연구모임 (1989). 『카프문학운동연구』. 서울: 역사비평사.
- 역사문제연구소 편 (1993). 『한국근현대지역운동사: 영남편』. 서울: 여강.
- 유종원·김송희 (2005). 미군정기 지역 언론 특성에 관한 연구: 광주지역 신문을 중심으로. 『언론과학연구』 제5권 2호, 276~307쪽.
- 윤덕영 (1995). 해방 직후 신문자료 현황. 『역사와 현실』 제16호, 341~379쪽.
- 이광석 (1997). 『경남언론 어제오늘』. 마산: 도서출판 경남.
- 이문교 (1997). 『제주언론사』. 서울: 나남.
- 이선영 (1982). 미군정의 언론정책에 관한 연구: 동아일보, 조선일보, 자유신문을 중심으로. 고려대대학원석사학위논문.
- 이용성 (1991). 미군정하 동아일보와 조선일보의 성격에 대한 연구: 민족언론의 관점을 중심으로. 한양대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일월서각 편 (1986). 『미군정 정보보고서 제13권』. 서울: 일월서각.
- 자명김지태선생전기간행위원회 (2003). 『문항라 저고리는 비에 젖지 않는다. 자명 김지태 평전』. 서울: 석필출판사.
- 정용욱 (2003). 1945년말 1946년 초 신탁통치 파동과 미군정: 미군정의 여론공작을 중심으로. 『역사비평』 62호, 봄, 287~322쪽.
- _____ (1995). 『인물한국언론사』. 서울: 나남.
- 『조선공산당재건동맹사건 발각에 관한 건』(京西高秘 제8613호의 3). 『사상에 관한 정보(7)』. 1934.2.7. 국사편찬위원회 한국사데이터베이스http://db.history.go.kr/front/dirservice/ibrowser/searchIpqData.jsp?pItemCode=ha_d&pStartPg=ha_d_117_0202&pEndPg=ha_d_117_0242&pLevel=4&pDatabaseID=ha_d&pRecordID=ha_d_117_0270&pTitle=%e6%9c%9d%e9%ae%ae%e5%85%b1%e7%94%a

3%e9%bb%a8%e5%86%8d%e5%bb%ba%e5%90%8c%e7%9b%9f%e4%ba%8b%e4%bb%b6+%e7%99%bc%e8%a6%ba%ec%97%90+%ea%b4%80%ed%95%9c+%ea%b1%b4 (2009. 7. 10.)

초병정 (1933). 대난전중의 동아일보 대 조선일보 신문전. 『삼천리』 제5권 10호, 10월호, 30~36쪽.

한국신문연구소 편 (1975). 『한국신문백년: 사료집』. 서울: 한국신문연구소.

한국역사정보통합시스템 <http://www.koreanhistory.or.kr/>

현경보 (1988). 미군정의 언론정책에 관한 연구. 연세대대학원석사학위논문.

(투고일자: 2009.8.18, 수정일자: 2009.10.8, 게재확정일자: 2009.10.15)

ABSTRACT

The Ideological Orientation of *Minjungbo* in Busan during the U.S. Military Government in Korea

Baek Chae*

The aim of this study is to examine the ideological orientation of *Minjungbo* which was the first and the largest newspaper in Busan during the U.S. Military Government in Korea. For this purpose this study analyzed the personal history of the editorial staffs and the coverage of the three historical events. The events analyzed were the supporting statement to trusteeship by Korean Communist Party in Jan. 1946, the money counterfeit by Jungpansa in May, 1946 and the general strike in Sep. 1946. The coverages of *Minjungbo* on these three events were compared with those of other newspapers which had shown the orientation of the rightist, the neutral, and the leftist respectively. Most of the editorial staffs had been involved the leftist movement but were not socialist to the core at that time. Most of them were the members of *Pusanilbo* which was published by Japanese in late colonial period. The coverages of *Minjungbo* were analyzed to be similar to those of *Seoulsinmun* which was evaluated as the neutral. But the coverage of the general strike was analyzed as leftist slightly. In conclusion it can be said that the ideological orientation of *Minjungbo* was the left-of-center.

Keywords: *Minjungbo*, Media History, Busan, Local Media, Political paper, Ideological Orientation, Journalist, U.S. Military Government, Content Analysis

* Professor(Dept. of Communication, Pusan National University)